

# 서울中心主義의 문제점과 地方大學/分校의 나아갈 길

金鍾一

(建國大 社會福祉學科)

## 1. 地方大學/地方캠퍼스의 現住所

나는 가끔 ‘지방 대학’이라는 우리 귀에 너무도 익숙한 단어의 뉘앙스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버릇이 있다. 지방 대학이라는 단어와 대칭이 되는 말이 될 서울 대학은 보통 국립 서울대학교를 가리키는 말이지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서울의 대학들은 다 자기의 고유 이름으로 불리기 마련이지 한데 뚱뚱그려서 불리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서울이 아닌 곳에 자리 잡은 대학들은 자기의 고유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지방 대학’이라는 아주 모호한 이름 아래 도매금으로 불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글 학회에서 만든 『우리말 큰사전』은 지방을 “어느 한 방면의 땅” 또는 “서울 밖의 땅인 시골”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 지방이라는 단어의 첫째 정의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이고 도리어 두번째 정의가 본 뜻인 것처럼 되어 버렸다. 이 두번째 풀이는 아마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그 비슷한 보기로 찾기 어려운 매우 한국적인 용법일 것이다. 서울이 아닌 다른 모든 지역을 죄다 ‘지방’이라는 간단한 말로 표현하는 우리 사회의 독특한 말

버릇 속에는 수백년에 걸친 국단의 서울 중심주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 있다. 이 잘못된 역사와 문화가 바로 거대한 괴물 서울과 황폐한 농촌을 만들어 낸 토양이었으며 오늘날 이 나라 대학교육의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한 지방 대학과 지방 분교를 낳은 자궁임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일이리라.

사실 지방 대학/분교의 문제를 짚어 보는 일은 한마디로 세심스럽다. 다 아는 것이기에. 뿐만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내버려 둔 지가 오래되다 보니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젠 쑥스럽기조차 하다. 또한 지방 대학의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서울의 대학들은 별 문제가 없고 지방 대학과 지방 캠퍼스만이 문제투성이인 듯한 느낌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실제로 지방 대학의 문제는 본질상 다른 종류의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대학의 보편 문제가 더욱 열악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학의 보편 문제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대학이 제구설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대학이 마땅히 해야 할 제구설이란 무엇인가? ‘국제화’니 ‘경쟁력’이니 하면서 나라 전체가 온통 소

동을 벌이는 시대에 매우 고티타분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 핵심은 결국 아카데미즘(academism)의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아카데미즘은 기본적으로 관념과 추상의 사고를 요구하며 대학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고의 방법을 훈련시키는 곳이다. 이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본질이고 핵심이다. 이것을 떠나면 대학은 그 존재 이유(raison d'être)가 사라진다. 물론 현실 사회의 기술적 요구를 대학이 깡그리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기초와 순수 학문이어야 한다. 취업과 관련된 모든 고려는 엄밀히 말해서 대학의 본질이 아닌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것이다. 따라서 요즘 대학 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가지고 마치 대학 교육의 실패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야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대학도 한국 경제 활성화의 첨병이 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이른바 대학 개혁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셈이다.

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보자. 이 나라의 언론 매체들은 지방 대학의 문제를 다룰 때 늘 “대기업의 입사원서 한 장 구할 수 없는” 딱 한 처지의 지방대학 졸업생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어느 정도의 과장은 있지만 이전 대체로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취업 문제에 관한 한 서울의 많은 사립 대학 졸업생들도 비슷한 형편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나는 대졸 실업자에 관한 문제는 본질상 인력 정책의 문제이지, 대학 교육의 실패 여부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가지고 지방 대학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은 본질적인 접근이 아니다. 게다가 같은 지방 대학이라고 해도 학교와 전공에 따라 취업 문제의 상황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점도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방 대학과 지방 캠퍼스의 핵심 문제는 대체로 (극소수의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들보다 아카데미즘의 환경이 더욱 열악하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우선 지방 대학/분교의 최대 문제는 계

토(ghetto)와 다름없는 교육 환경이다. 그 중에서도 교수들의 연구 여건은 황량하기 이를 테 없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대학이 소도시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면에서 장점이 될지언정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은 드물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뛰어난 연구 환경 때문일 것이다. 특히 완벽에 가까운 도서관 체제와 컴퓨터 통신망은 소도시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단숨에 극복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도시의 단순 소박한 생활과 맞물려 학문의 생산성을 높여 준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지방 대학들은 작은 도시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최신 학문의 정보가 서울을 중심으로 배급되기 때문에 서울로부터의 물리적인 거리가 곧 학문의 격차로 이어지는 일이 허다하다. 이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圖書館 體制와 컴퓨터 通信網을 제대로 갖추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도서관은, 일반 도서관이든 대학 도서관이든 상관없이, 책을 보관해 두는 창고 노릇이 아니면 학생들에게 공부방 제공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삼은 지가 꽤 오래 되어서 그 밖에 무슨 할 일이 또 있을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마저 있을 것이다. 요즈음 대학의 ‘위기’를 그렇게 떠들어 대는 신문들단 해도 대학 도서관의 참기능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도서관에 빙자리가 없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희소식이나 되는 듯이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한심한 노릇이 아닌가. 토플체과 법전을 펴놓은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대학 도서관을 메우고 있다고 해서 ‘이제야’ 대학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해가 아닐 수 없다. 대학의 도서관은 대학 구성원들이 연구하는 데 필요한 온갖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쌓고 정리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수요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곳이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대학의 경우엔 도서관이 사활적인 존재가 된다. 한국과 같이 정보와 자료의 중앙집중이 극심한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 대학의 도서관은 이 역할을 수행할 체계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상당수 지방캠퍼스의 경우엔 도서관이 아예 기숙사 학생들의 공부방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교수들이 도서관에 드나드는 것조차 민망스러울 지경이다.

한편, 지방에 있는 대학은 지리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대학들보다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 기기를 더욱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점에서도 지방 대학은 뒤떨어지고 있다. 아주 실제적인 보기로 하나 들어보자. 컴퓨터 통신이나 FAX의 이용에 전화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 대학들은 해당 도시를 벗어난 지역과 통화를 할 때 반드시 교환을 거치도록 해놓아서 자료와 정보의 신속하고 원활한 교환을 어렵게 만든다. 어떤 학교의 FAX는 숫자 송신 장치를 참가두고 수신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경우까지 있다. 전화 요금을 줄이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그야말로 궁여지책인데 이런 손을 끊어둔 채 권투 시합에 나가라는 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화를 지향한다고 떠들어대니 참으로 공허할 뿐이다. 실험 실습에 필요한 시설과 기재에 관해서는 차라리 말을 안하는 것이 나오리라.

나는 우리나라 지역 사회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조도 지방 대학의 연구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지역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 지역 사회에서는 소수의 재력가나 관변 인물들이 지역 사회의 향방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부 교수들이 강의와 연구 활동은 소홀히 한 채 이들과 영합해서 유지 행세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들은 거개가 학내의 정치판에도 상습적으로 끼어들어 교수 사회의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연구에 열중하는 다른 동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기 일쑤이다. 더욱이 지역 유자들과 학교 경영진의 유착이 심한 사람 대학의 경우엔 이러한 교수들이 학내 민주화와 지역 민주화를 방해하는 수구 세력의 앞잡이 노릇까지 하게 된다. 이러한 인물들이 관을 치는 상황에서 대학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정체될 것은 뻔한 노릇이며 잘못된 상황을 바꿔보려는 일단의 노력도 좌절되기가 쉽다. 이것은 다시 뜻 있는 교수들의 대학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시들게 하고 연구 의욕을 감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지방 대학의 정체성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교수들의 채용 과정에서 작용하는 지역 주의와 파벌의식이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지방 대학에서 그 정도가 훨씬 심하고 또한 지역 사회의 폐쇄성과 맞물리면 그 부작용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이다. 특정 지역의 대학에는 특정 지역, 그것도 특정 고교 출신이 아니면 서류조사 내밀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이렇게 특정 지역의 연줄과 학연으로 뭉쳐진 사람들이 파벌을 형성하여 학내의 보직이나 팀내고 매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 학문의 발전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일부 대학에는 본교 출신 교수들의 비율이 터무니 없이 높아서 학문하는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특히 지방 캠퍼스 같은 곳은 아예 본교 대학원 졸업생들의 취직 자리나 실습지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지방 캠퍼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계속해 보자.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손바닥만한 땅덩이에서 대학의 분교라는 개념은 그 발상부터 문제가 있었다. 명분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었지만 본질은 사람 대학의 정원을 편법으로 늘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대학, 특히 서울소재 대학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원을 무한정 늘려줄 수도 없고 학생들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대학은 증원을 안 해주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니 정부와 사람 대학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분교 정책이었다. 지방 캠퍼스 계획이 발표되기 무섭게 대학들은 대학의 기능과 임무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을 할 틈도 없이 땅 값싼 서울 근방에 건물 한두 채를 덩그러니 짓어 놓고 부리나케 학생들을 받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지방 캠퍼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원죄'의 결과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역 개발 이야기만 나오면 이른바 속원사업이라며 으레 대학 유치 소리가 감초처럼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으로 우리 사회의 대학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보여 주는 셈이다.

어떤 면에서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캠퍼스는 지방 대학보다도 더 문제가 많고 해결 전망도 어두워 보인다. 우선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서울 출신인데 이것은 지방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넘혀주겠다는 분교 정책의 원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숙사 시설 미비나 학내외 활동의 제약(예컨대 학원 수강) 등의 이유 때문에 통학을 하고 있어서 대학의 만성적인 空洞化 현상을 일으키는 한편 수도권 교통량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학 때의 지방 캠퍼스는 문자 그대로 放學이다. 특히 겨울 방학이 되면 학생과 교수의 그림자도 보기 어렵다. 모두 기나긴 겨울잠에 들어가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 캠퍼스 학생들의 상당수가 학교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없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도 상대적으로 낮아서 교수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 문제를 포함하여 지방 캠퍼스 학생들의 실정에 관해서는 글쓴이가 이미 『대학교육』지의 칼럼을 통해 다룬 적이 있었기에 여기서 되풀이 하지는 않겠지만 사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만은 다시 지적해 두고 싶다.

그렇다면 교수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대개 지방 캠퍼스에 자리 잡는 교수들의 첫번째 고민은 거주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서울에 사는 교수들의 경우에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학교의 소재지에 가서 사는 것이 강의와 연구 활동에 가장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자녀들의 교육이나 배우자의 직장 문제도 걸려 있고 자신이 겪게 될 사회 활동의 제약도 무시할 수가 없다. 더구나 열악한 연구 환경과 지역의 폐쇄성이 결합되면 학문은 물론 사회 생활의 여러 면에서 고립감과 낙오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렇다고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자니 시간과 돈의 낭비도 크고 학교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기 십상이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손해를 보게 된다.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어느 학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막아 보려고 교수 채용의 조건으로 지역 거주를 강제하고 있다. 물론 교수들의 주거 문제까지 간섭해야 하는 학교 당국의 입장도 이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엄밀히 말해서 개인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일이다. 손쉽고 간단한 방법일수록 문제를 악화시키기 쉽다. 오히려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차근 차근 분석하고 지방 캠퍼스의 연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 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지방 캠퍼스 교수들의 두번째 고민은 대학원이 없기 때문에 연구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어느 지방 캠퍼스에 근무하는 나의 후배 교수 한 사람은 실험을 하기 위해 주말마다 자신의 모교가 있는 서울을 찾아 다닌다고 하였다. 실험 시설과 기재도 태부족이지만 자신의 연구를 도와 줄 혼련된 대학원생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원이 없으니 조교도 구하기 힘들다. 편법으로 학부 졸업생을 사무 조교로 임용하는 일이 혼하다. 사실 대학원이 설치된 지방 캠퍼스는 거의 없다. 대학원은 으레 본교에 설치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원생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실험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많은 동료 교수들이 입만 열면 대학원 타령을 한다. 이 글을 쓰는 나 자신도 대학원이 없기에 겪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학마다 일률적으로 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많은 지방 대학들이 거의 예외없이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그 교육 내용이 부실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별로 없는 형편이다. 대학원이 없어서 생기는 어려운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지방 캠퍼스의 연구 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반면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원을 무차별하게 인가해 준다면 고등 설업체단 양산할 터이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구조개편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속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지방 대학이 지역 사회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와 유착할 때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지방 캠퍼스의 경우는 오히려 지역 사회의 '텃세'가 심한 탓에 자기 정체성(self identity)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지역 주민들이 지방 캠퍼스를 대하는 태도는 마치 서울 사람들의 별

장을 대하는 것처럼 대체로 오분관언적이며 적대적인 경우도 종종 있다. 지방 캠퍼스가 해당 지역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위치만 해도 그렇다. 거개의 지방 대학들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캠퍼스는 대부분 해당 도시의 벤두리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과는 별로 접촉이 없다. 택시 운전수들과의 바가지 요금 시비가 유일한 접촉이라면 접촉일까. 지역 주민들 가운데는 지방 캠퍼스를 기피하여 인근의 다른 지방 대학으로 자녀를 ‘유학’ 보내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지방 캠퍼스 구성원 사이에는 편견의 벽까지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지방 캠퍼스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그 어떤 현실적인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현실적인 해결 전망이라는 것은 혁행의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 물론 현재의 법과 제도를 혁명적으로 뜯어 고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그와 같은 일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방 캠퍼스의 문제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 2. 問題의 원인과 배경

우리와 교육 구조가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고 하는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일본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은 혼히 東京 대학이라고 한다. 물론 수도인 도쿄에 있다. 이밖에 와세다나 게이오와 같은 명문 사립 대학도 도쿄에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방 대학, 특히 국립 대학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도쿄에 있는 대학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京都 대학 같은 ‘지방’ 국립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를 여럿 배출하였고 학문 수준이 東京 대학을 능가한다고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일이 불가능한가? 모든 좋은 것은, 대학을 포함하여, 왜 서울에만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서울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곧 서울이다. 이 점은 서울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한다는 정치와 경제의 모든 중

요한 결정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따위의 가시적인 수치나 지표로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역사적이고 상정적인 사실이다. 이 글의 미리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서울 중심주의 혈상은 역사적으로 그 뿌리가 매우 깊은 것이다. 이것은 다시 해방 이후의 우리 정치가 칠저한 일인 독재로 만신창이가 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박정희정권 시대에 추진하였던 경제개발계획이 지역의 불균형과 서울 집중 현상을 악화시킨 결정적 요인이었다. 지방 대학 중에도 수도권에 가깝거나 영남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의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데 이것은 지역 차별 정책의 소산이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지역의 불균등한 발전과 아울러 공업 중심의 성장 정책이 농촌을 황폐하게 만들고 지역의 젊은이들을 대도시, 특히 서울로 몰리게 하였으니 지방 대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발전할 여건을 갖출 수 없었던 것이다. 똑똑한 학생은 서울에 빼앗기고 성적이 뛰어거나 집안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들어와서 열악한 환경 아래 공부하니 그 결과가 뻔 할 수밖에 없다. 일찍부터 지방 자치가 제대로 실시되고 균형적인 지역 발전이 이루어졌더라면 우리도 일본의 京都 대학과 같은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었으리라. 미국의 주립 대학들은 주정부의 투자여부에 따라 일약 상위권에 진입하기도 하고 형편없는 학교로 전락하기도 한다. 석유값이 한창 치솟을 때 석유 수입이 많았던 텍사스주에서는 텍사스네 주립 대학들에 엄청난 투자를 하여 평범한 학교에 불과하던 텍사스 대학을 상위권에 끌어 올리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중서부의 여러 주들은 농업을 제외하면 별 다른 산업이 없는데도 훌륭한 주립 대학들을 가꾸어 왔다. 한국과 같이 철저한 중앙집권 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한국의 경우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지원과 투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마저 있으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구비의 분배나 외부 기부금의 유치에서도 지방 대학이 받는 불이익은 이미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기업들이 산학 협동이다 뭐다 해서 대학에 기부하는 돈은 서울, 그것도 두 세 학교에

집중되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홍보 효과도 크고 우수 인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지방 대학에 투자를 끼리는 것이 당연하리라.

서울 집중 현상은 일자리의 분포에서도 뚜렷하다. 이공계의 경우는 많은 공장이 지방에 자리잡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인문 사회계의 일자리는 절대 다수가 서울에 있다. 이것은 결국 지방 학생들의 서울 유학과 서울 정착을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이며 지방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셈이다. 어차피 서울에서 일자리를 잡고 살아야 할 상황이라면 대학부터 서울로 가야 한다는 심리적 현실적 압박감을 지방 학생들이 느낄 것은 뻔하다.

그러나 현재 지방 대학과 분교가 겪는 모든 문제들을 좌우하는 서울 집중 현상과 중앙 집권 체제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오늘날 지방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대학의 설립과 운영이 교육외적인 변수에 의해 좌우되어 왔기 때문에 생겼다. 지금까지 대학은 돈벌이의 좋은 수단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망하지 않는 것은 은행과 학교뿐이다. 설립 인가를 받고 문만 열어 놓으면 들어오겠다는 학생들이 줄줄이 서 있으니 이렇게 편하고 쉬운 ‘장사’도 없을 것이다. 강의실과 실험실이 제대로 있는지, 교수진은 온전히 확보했는지 그리고 따질 형편이 아니었다. 이 나라의 잘못된 사회 구조와 입시 지옥이 싸구려 대학들을 양산한 온상이었다. 한편, 지방 사립 대학의 대부분은 족벌 경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개인이 대학을 세우는 경우는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대손손 설립자의 집안에서 대학을 맡아 운영하는 경우는 한국에서나 있는 일이다. 선진국의 명문 사립 대학에 도대체 주인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대학의 ‘주인’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학교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물론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경험을 보면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다. 기업의 족벌 경영이 기업의 발전에 결림돌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하물며 아카데미즘을 추구하는 대학에서 족벌 경영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육영 사업’을

한다면서 육영에는 관심이 없고 사업에만 눈독을 들이는 사학 경영자들이 어디 한둘이었나. 족벌 경영의 대명사였던 조선 대학이나 상지 대학의 만성적인 분규가 이들 학교의 발전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었는지는 이미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닌가. 특히 지방 사립 대학의 족벌 경영 체제는 대개 지역 사회의 이른바 유지들과 밀착되어 학교의 발전은 물론 지역 사회의 민주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 게다가 이들의 비리는 지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중앙 언론의 눈을 피하기가 쉬워 아주 고질적인 병이 되기 마련이고 문제가 돌아 터져서 치료와 해결이 매우 어려워진 연후에나 드러난다. 지방 사립 대학의 부실화에 대해서는 정부에도 큰 책임이 있다. 여기서 대학 설립 인가를 마구잡이로 내어 준 그동안의 정부 잘못을 새삼스럽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마땅히 간섭하고 감독해야 할 부분은 내버려 두고 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은 귀찮을 정도로 참견하는 못된 버릇이 많은 지방 사학들을 오늘날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만은 꼭 지적하고 싶다.

### 3.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언제나 문제를 지적하기는 쉬워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지방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편하기는 과거의 군사 정권이 출격하면 통폐합이나 쌍쓸이 방법이 좋겠지만(?) 엄청난 기득권과 이해 관계가 얹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문민 정부’ 시대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리고 글쓴이 자신이 지방 캠퍼스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 자기의 ‘밥풀’을 중심으로 생각할 가능성마저 있다. 그러나 곰곰이 그리고 정말 ‘마음을 비우고’ 생각해 보면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현재의 상황도 문제더니와 앞으로 우루과 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교육 서비스 부문이 개방되면 상당수의 대학, 특히 지방 대학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출산율의 저하와 진학 희망자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까지 감안하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멀지 않

은 장래에 서울에서 먼 곳에 있는 학교부터 차례로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농담아닌 농담이 요즘 지방 캠퍼스 교수 사회에 심심치 않게 퍼지고 있는 사실은 이러한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저기에서 대학도 살아 남기 위해서는 이른바 경쟁력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백가쟁명이 한창이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동시에 경쟁력있는 학교가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그것도 있으나마나 한 대학이 너무 많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대학이 죄다 모든 학과를 갖춘 종합 대학(university)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특수 대학인 교육 대학 같은 학교조차 '교육 대학교' (university)라는 명칭을 쓴다. 종합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연구이다. 과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는커녕 수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 지방 대학의 엄연한 현실 아닌가. 미국에는 수천 개의 대학이 있지만 연구 중심의 진정한 종합 대학은 백 개를 넘지 않는다. 우리의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먼저 '구멍 가게 멘탈리티'를 던져 버려야 한다. 먼지가 뿐만 아니라 잡화들을 진열대에서 제거하자.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상품이 진열된 고급 백화점을 차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 나라의 대학들마다 세계적인 고급 백화점이 되겠노라고 허풍을 떨고 있지만 우리 대학의 모습은 달동네 구멍 가게가 아닌가. 이 구멍 가게는 이제 문을 닫든지 전업을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은 물론 지방 대학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나라의 서울 중심주의는 별로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개방의 태풍은 아직은 비록 면 바다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곧 밀어 닥칠 것이다. 지방 대학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지방 대학이 살아 남으려면 어설픈 구멍 가게를 청산하고 지역 특성과 사정에 맞는 전문점으로 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허황된 구호를 버리고 현실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를 냉철히 생각해야 한다. 금광과 탄광이 많은 미국 콜로라도에는 광

산 대학(school of mining)이 있고 농업지대인 중서부에는 농과 대학과 통계학과가 발달하였다.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보기를 찾기 어렵다. 서울에 농과 대학들이 있는가 하면 소도시의 신설 학교에도 법학과와 영문과는 필수 품목이다. 요즘에는 이른바 첨단 분야가 아니면 중과와 중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학교마다 첨단 바람이 불고 있다. 중복 투자의 문제는 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자원이 극히 부족한 우리나라 대학의 형편에서 중복 투자는 다같이 망하는 확실한 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하는 것도 우습다. 1970년대에 지방 국립 대학의 공과 대학을 분야별로 특성화시킨다고 정부가 나선 일이 있었지만 십여 년이 지난 지금 거의 다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결국은 대학 자체가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전이 양호하고 자신감과 의지가 뚜렷한 학교는 세계적인 대학들과 겨루어 조금도 손색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목표를 크게 가져보는 것도 좋으리라. 하지만 모든 지방 대학들이 세계적인 학교가 될 수도 없을 터이고 또 필요한 일도 아니다. 객관적 상황이 어려운 학교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솔직히 인정해서 세계적인 대학 운운하는 공허한 구호를 버리고 지역의 두뇌 노릇을 좀 더 내실있게 수행해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사회의 민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의미의 地域自治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유지 중심의 지역 사회 구조가 타파되고 민주적 자치 구조가 형성되면 지역의 전체 이익을 반영하는 특성화가 가능해지고 좋은 대학을 만들어 보겠다는 지역 주민의 열기도 높아질 것이다. 이와 아울러 사람 대학의 족벌 경영 체제도 민주화되어야 한다. 대학의 운영을 장사속이 아닌 교육과 학문의 차원에서 제대로 해나가려면 족벌 체제의 타파는 시급한 선결 과제가 된다. 대학의 장래를 학내의 모든 구성원이 진지하게 걱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는 작금의 위기를 뚫고 나가기가 힘들다. 족벌 경영은 교수 사회를 분열시키고 개혁 에너지의 창출을 방해하기 쉽다.

지방 캠퍼스는 이중의 덜레마를 안고 있다. 지방 대학 일반의 문제 말고도 본교와의 어정쩡한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크다. 극언을 하자면 일종의 내부 식민지(internal colony)라고 할까. 분리 뚜렷을 할 처지도 못되고 이대로 종속적 위치를 유지하자니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나는 지방 캠퍼스 문제의 해결 방안은 다음 두 가지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믿는다. 첫째는 중복 학과를 서울 캠퍼스와 통폐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를 집중적으로 키우는 일이다. 같은 상표로 두 개의 절이 다른 상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게 아닌가. 또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학교일수록 전문화가 필요하다. 둘째는 아예 지방 캠퍼스를 없애는 일이다. 조금 과격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발상의 혁명적 전환이 없으면 지방 캠퍼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의 지방 캠퍼스 시설은 특수 목적을 가진 학부나 교양 과정부로 사용하면 된다. 첨단 기술 바람이 불면서 인문학이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고 교양 학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땅에 떨어졌는데 비판적이고 추상적인 인문학적 사고의 훈련이 없이는 장기적으로 과학 기술의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지방 캠퍼스를 없애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교양 학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정부나 대학 모두가 진지하게 고려해 보기로 바란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대로 지방 대학과 지방 캠퍼스의 모든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서울 중심주의와 역대 정부의 강고한 중앙 지배 체제, 지역 차별과 농촌 경시라는 복합적인 풍토 속에서 자라 왔다. 따라서 지방 차치의 확대,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농촌의 부흥이 전제 되지 않으면 지방 대학이 당면한 문제의 근본 해결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서울은 이제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소 도시의 하부구조는 여전히 60년대의 골격을 유

지하고 있다. 고층 빌딩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월요일 아침의 고속도로는 주말을 서울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지방의 근무자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늘 만원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곰곰 생각해 보았는가. 농촌과 중소 도시의 인구가 줄고 있다는 소리는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다. 지방 대학과 지방 캠퍼스의 소재지나 배후 도시가 되는 농촌과 중소 도시에 사람이 없어진다면 지방 대학의 발전 운운은 공염불이다. 아울러 온전한 지역 차치가 급하다. 실권도 없고 임기 체우기에 급급하는 지방 관서의 임명적 長들에게서 무슨 장기적이고 실제적인 지역 발전 계획이 나오겠는가.

요즘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는 지역의 조그마한 대학에도 조만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국내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는 판에 외부의 파도까지 밀려 온다면 살아 남을 지방 대학은 많지 않으리라. 하루살이식 살림을 그만두고 장기적인 구조 개편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정부가 할 일은 올바른 정책으로 이 작업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 대학 활성화 이야기만 나오면 기업에게 지방에 출신 채용을 의무화시키는 따위의 방안들이 정부 안팎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곤 하는데, 나는 이러한 방식의 해결책이 지방 대학 활성화에 단기적으로 약간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 대학의 문제는 본질상 구조적인 것이다. 정부의 대책도 당연히 구조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방 대학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방의 중소 도시와 그 배후 농촌의 활성화가 지방 대학 활성화의 선결 과제이다. 정부의 지방 대학 육성 정책은 地域活性化 政策이라는 큰 틀 속에서 형성되어야 그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을 것이다. ■